

#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17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The logo for the Gangwon Provincial Assembly, featuring three overlapping colored shapes (green, blue, orange) containing the words '섬기는' (serving), '일하는' (working), and '가까운' (close). Below this is the text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Assembly).

江原日報	[ ]	17	(東谷賞)		1	
江原日報	[ ]	17	(東谷賞)	[1/2]	2	
江原日報	01				3	
江原日報	01	"		"	3	
江原日報	03	"	...	...	4	
江原日報	02	“ ~ 道 ”			5	
이뉴스투데이		,	~	...	6	
강원도민일보	03	"	" vs "	"	...	7
江原日報	02				8	
		‘		가 ...	‘	9
ms투데이		,		? “	” vs “ ...	10
ms투데이		,		? “	” vs “ ...	11
		,		...!	'[1/...	12
		,		...!	'[2/...	13
		"		.	...	14
		,	5			15
		"		GJC.	...	16
江原日報	02	"2,050	GJC	"		17
江原日報	02	"		"		18
강원도민일보	03	"		"		19
강원도민일보	01	~		,	...	20
강원도민일보	03					21
강원도민일보	11	[ ]	( )			21
강원도민일보	04	,				22
CBS		'		'	' [1/2]	23
CBS		'		'	' [2/2]	24
강원도민일보	19	[ ]	.	,		25

<b>강원도민일보</b>	19	[ ]	.	26
<b>江原日報</b>	19	[ ]	‘ ’,	... 27
<b>江原日報</b>	19	[ ]	‘ . ’,	..28

# 江原日報

## [포토뉴스]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준기 DB그룹창업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준기 DB그룹창업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 江原日報

## [포토뉴스]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준기 DB그룹창업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앞줄 왼쪽부터 고하운 풍헌병풍서연구원장(문화예술부문) 가족, 이돈섭 대한적십자강원도지사회장(사회봉사부문)가족, 오덕환 강원대 식품생명공학과교수(교육학술부문) 내외, 김숙자 전 배화여대총장(자랑스러운출향강원인부문) 내외. 박승선기자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준기 DB그룹창업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앞줄 왼쪽부터 고하운 풍헌병풍서연구원장(문화예술부문) 가족, 이돈섭 대한적십자강원도지사회장(사회봉사부문)가족, 오덕환 강원대 식품생명공학과교수(교육학술부문) 내외, 김숙자 전 배화여대총장(자랑스러운출향강원인부문) 내외.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강원 발전 선도해 온 영광의 얼굴들** 제17회 동곡상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이스호텔에서 열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한기호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내빈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앞줄 왼쪽부터 고하운 풍헌병풍서연구원장(문화예술 부문) 가족,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사회봉사 부문) 가족, 오덕환 강원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교육학술 부문) 내외, 김숙자 전 배화여대 총장(지량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 내외, 김남덕기자

江原日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이끌어 나갈 인재상 제시”

**제17회 동곡상 시상식**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강원도 출신 4명의 인사가 최고 권위의 상이자 명예인 동곡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3·21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는 16일 춘천 베이스호텔에서 제17회 동곡상 시상식을 열고 문화예술부문 고하운(79) 풍헌병풍서연구원장, 사회봉사 부문 이돈섭(83)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 교육학술 부문 오덕환(62) 강원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지량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

**부문별 수상자 각 2천만원  
도내 각계 단체장 한자리**

문 김숙자(78) 전 배화여대 총장 등 수상자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지역발전 부문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한기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강원일보사장)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은 “지금까지는 또 다른 새로운 강원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곡상이 선전의 유지인 강원도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동곡상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자체로, 동곡 김진만 선생의 뜻을 김준기 창업회장이 대를 잇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벨상 같은 상이 되도록 돕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많은 인재의 지혜와 경륜을 빌

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앞으로도 동곡상이 우리 고장의 숨은 영웅을 찾아내고 차세대 인재 발굴 육성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동곡상은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모범이 된 분들을 발굴해 도민들과 함께 축하해 왔다. 도교육청도 동곡 김진만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가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곡상은 7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정회장, 강원일보 제2대 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자취를 남긴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이 자신의 아호를 따 1975년 직접 제정했다. 제정 후 5회까지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재들을 발굴·격려했으나 198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부친인 동곡 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2011년 32년 만에 동곡상을 부활시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의 주관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지역이 낳고 키운 인재들 ... 강원 미래 밝혀줄 환한 등불 되길”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한기호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내빈과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수상자 축하 리셉션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에 이어 열린 수상자 축하 리셉션은 동곡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된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이 걸어 온 치열한 삶을 듣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동곡상 심사위원장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건배사에서 “수상자들의 면면은 훌륭했고 후보들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었다. 강원도에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느꼈다. 수상자들뿐 아니라 모든 강원도민이 시상식의 좋은 기운을 받아 도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하겠다”고 해 환호를 받았다.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은 동곡상 제정 취지처럼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인재들 잘 키워 내자고 다짐했다.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 회장은 “강원도에 인재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사말 하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제17회 동곡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 발전 해답 ‘사람’ 공감 ... 젊은 세대 육성 노력 다짐  
변방 이미지 벗어나길 소망한 김진만 선생의 뜻 되새겨

했다. 오늘 신경호 도교육감님께도 강원도 아이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는데, 미래 세대들이 각 분야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수상자들의 이력을 살펴보니 제가 앞에 나설 자격

이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반받으며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동곡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우리 사회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서산대사께

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고 했다. 내가 가는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동곡상이 어려운 시기 강원도 미래를 활짝 밝히는 빛이 되리라고 믿는다. 저 역시 수상자로서, 봉사자와 헌신자의 의미를 새기며 일하겠다”고 축하했다.

이날 축사와 수상자들이 밝힌 소감들은 동곡상을 제정한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이다.

삼척 출신인 김진만 선생은 국회 부의장과 대한민국헌정회장, 7선 국회의원, 강원일보 제2대 사장 등을 역임하며 고향 강원도가 번영 이미지를 띠어달라길 소망했다. 그리고 강원 발전의 해답을 ‘사람’에서 찾아내 동곡상을 제정했다.

1979년 폐지됐던 동곡상을 2011년 부활시킨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뜻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동곡상은 향토인재들을 찾아내고 격려해 강원 발전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2 11 17 ( )  
02



“세종~포천 고속도 철원 연장 조기 착공하라” 권혁열 강원도의회장과 의원들은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박승선기자

이뉴스투데이

# 강원도의회,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조기착공 촉구

김경석 기자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의 조기착공 건의문 발표 모습. [사진=강원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도의원 일동은 16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동서고속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을 통해 강원도 접경지역과 남부권의 광역교통망 음영지역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원군은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70년 이상 각종 군사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 채 낙후되고 있다"며 "범 국민 1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1만 여명이 서명하는 등 모든 군민이 하나 되어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사업이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고 충청권과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남북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공공기관 이전 촉진 등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 11 17 ( )  
03

## 강원도민일보

# “김진태 잘못” vs “최문순 책임” 레고랜드 사태 네트 공방

정례회 5분발언 여야 의원 격돌  
여, 김진태 험신기 최문순 비난  
야, 현 도정 불통 사과없다 지적



이지영 정재웅 박윤미 김기홍 임미선 이기찬

‘레고랜드사태’를 두고 여야도원들이 16일 본회의장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영(비례) 의원은 이날 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 문제는 김진태 도정의 불통”이라며 “회생신청 대상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물론, 채권단과 협의조차 하

지 않은 채 (회생신청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JC 회생신청 사안은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김지사는 언론을 통해 회생신청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재웅(춘천) 의원도 “도는 GJC 회

생신청과 채무변제를 별건인 것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도가 GJC에 채무상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춘천시가 보증한 채권 금

리는 5.6%에서 13%로 2.5배가 뛰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누구하나 진솔한 책임있는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문순 전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강원도 재정과 세금 지키기 타이밍으로는 그나마 더 늦기 전, 최적타이밍이고 예상치 못했던 채권시장 현실로는 불운한 타이밍”이라며 김지사에 힘을 실었다. 임미선(춘천) 의원은 “정치권에선 강원도를 혼드는 맹비난과 억측이 난무하기만 한다”며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기찬(양구) 의원은 2020년 강원도 국정감사 당시 최 전지사 발언을 언급하며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유적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올지 몰랐다니 이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말이나”고 했다. 그러면서 “감자 팔아줄 생각 말고, 대규모 사업들을 잘 살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최 전지사를 지적했다.

한편 도는 회생신청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 여부에 대해 “회생신청은 지방재정법의 ‘사업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의 변경과는 무관해 도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설화

# 江原日報

2022 11 17 ( )  
02

## 레고랜드 사태 책임론 놓고 도의회 여야 충돌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속보=‘레고랜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중앙정치권의 책임 공방(본보 지난 14·15·16일자 3면 보도)이 강원도의회에서도 격렬하게 이어졌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갭을 채무보증금액 2,050억원이 담긴 강원도 제2차 추경안 심사를 앞둔 16일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 3명씩 연단에 올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김

진태 지사의 선부른 판단으로 채권시장의 돈맥경화 상황을 초래했다”며 “김 지사는 GJC 및 채권단과 협의하지 않았고, 도의회에 일체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재웅(춘천) 의원은 “보증채무 상환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GJC에 대한 회생신청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윤미(원주)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능, 아집이 만든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최문순 전 도정으로 돌렸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김 지사가 강원도 재정과 세금을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햇볕을 들었으나 채권 시장에는 불운한 타이밍이었다”고 김 지사를 감쌌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회생신청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이 필수적인 절차인지도 의문이고,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기찬(양구) 도의원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등은 최 전 지사가 최대 업적이라고 손에 꼽은 사업들이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하늘기자

## '레고랜드 논란' 강원도의의회 가세...김진태 '때리기'와 '지키기'



[앵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중앙당 차원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16일) 강원도의의회에서도 똑같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의의회 본회의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여야 의원들이 5분 발언에 나섭니다. 발언자는 모두 6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명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단 하나, 레고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민주당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놓고, 김 지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이지영/강원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되레 성냥불을 던져 경제 참사의 대형산불을 초래한 것입니다."]

[정재웅/강원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 "지사님의 회생신청의 목적이 2,050억 원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박윤미/강원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 "진솔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가 전부입니다."]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김 지사가 아니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김기홍/강원도의의원/국민의힘 : "김진태 지사는 헛불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재정과 세금 지키기 타이밍으로는 그나마 더 늦기 전 최적 타이밍이고."]

[임미선/강원도의의원/국민의힘 :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강원도를 흔드는 맹비난과 역측이 난무하기만 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의원/국민의힘 : "문화유적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올지 몰랐다니 이게 강원도를 책임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강원도의의회는 이달 23일부터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엔, 중도공사 부채 상환 비용 2,050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성은

## 여야 강원도의원, 레고랜드 사태?“전 정권 탓” vs “사과해라”

허찬영 기자

김기홍 “지난 정권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원인”  
 임미선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고 정쟁 수단으로 활용”  
 박윤미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신뢰 희생시킨 사건”  
 정재웅 “희생 신청계획, 의회와 충분히 협의·보고해야”



김기홍 부의장(왼쪽부터), 임미선 의원, 박윤미 의원, 정재웅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인 가운데 도내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이어졌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16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희생 신청 시기를 두고 “강원도 재정과 세금 지키기 위해서는 그나마 더 늦기 전 최적 타이밍이고 예상치 못했던 채권시장 현실로는 불운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현 채권시장이 금융경색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단기간 기준금리가 6배나 상승한 점을 꼽았다. 또 한국전력 채권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잠식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채권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미선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강원도를 흔드는 맹비난과 역측이 난무한다”며 “강원도가 내달 15일까지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원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 11 17 ( )

**ms**투데이

이어 “내년 6월 출범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18개 시·군과 강원도는 여러 현안과 방향을 고민하고 국비 확보 등 여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더는 레고랜드 사태로 강원도의 결집과 발전이 방해돼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적 이해 접근에 따라 그 사실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JC의 회생 신청 계획과 부채상환계획 등이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은 “강원도는 예정에도 없고 순전히 도민의 혈세로만 2050억원의 보증 부담을 지는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이 제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일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금융기관이 ‘채권시장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강원도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냐”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와 신뢰를 희생시킨 사건이다. 거기에 시장경제의 무지와 무능, 아집이 만든 대참사”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GJC는 강원도가 지분 44%를 갖고 있으며 강원도의 직인이 없이는 자금 집행도 되지 않는 회사가 강원도에 협조해주지 않아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며 “김 지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도민을 위한 현명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정재웅 의원도 GJC의 회생 신청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채무상환 예산편성 심의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강원도는 GJC 회생 신청과 채무변제를 별건인 것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GJC의 2050억원 채무상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 국힘 이기찬 부의장, 민주강원도당... '정면 충돌'

기사내용 요약

이기찬 5분 자유발언에서 '불량감자 문순씨' 14번 언급  
'응답하라 불량감자 최문순 최문순' 4회 구호 외쳐  
오른손 팔뚝까지 들어올리는 퍼포먼스까지

민주당 "모욕주기 불쌍 사나운 추태, 품위 품격 팽개친 이기찬"  
"선거법 위반 재판 앞둔 자가 전 지사 비판 소가 웃을 일"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16일 오전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문순 전 도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022.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국민의힘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정면 충돌했다.

이 부의장은 16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문순 전 지사가 추진했던 레고랜드, 알펜시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대형사업을 조목조목 들춰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 11 17 ( )

공/감/연/론 뉴시스  
**NEWSIS**

이 부의장은 5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불량감자 문순씨'를 14번 말했고 '응답하라 불량감자 최문순 최문순' 구호를 4회 외치며 오른손 팔뚝까지 들어올리는 퍼포먼스까지 펼쳤다.

'감자 완판남 문순C'는 최 전 지사가 재임 시절 감자 판매 마케팅의 좋은 성과가 나오자 자신의 정치적 마케팅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캐치 프레이즈였다.

이 부의장은 "불량감자 문순씨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비록 전직이지만 강원도정에 미칠 파장이 크고 불량감자 문순씨를 지지하고 응원한 강원도민들이 입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수사가 이뤄줘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의 법적문제는 빠른 시일에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불량감자 문순씨 운운하며 최문순 전 지사 모욕주기에 나서며 불쌍 사나운 추태를 보였다"며 "손톱만큼의 품위와 품격마저도 팽개친 이기찬 도의원의 행태에 부끄러움은 온전히 도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또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1월29일 1심 재판을 앞둔 이 의원이 전임 지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수준 이하의 이 의원에 대해 논평 쓰는 것조차 아깝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 전 지사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이 부의장에게 요구했고 "자중하고 성찰하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이지영 의원 "김진태 지사 협치.신뢰.리더십 무너져"

기사내용 요약  
결자해지 위해서 레고랜드 사태 진심어린 사과 촉구



[춘천=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지영(고성) 강원도의회 의원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022.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지영(고성.비례대표) 강원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태 지사의 독불장군식 통보로 대한민국 금융불안 사태가 심각해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도 않은 채 추경으로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발표해 도의회를 '거수기의회' '식물의회'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지사의 선부른 판단으로 강원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고 "'본의 아니게 조금 미안하게 됐다. 억울하다. 빚 좀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경위야 어찌 됐든 면목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강원도민들께 또 한번 실망을 안겨 리더십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너진 협치, 무너진 신뢰,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은 김 지사의 결자해지"라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재웅 의원, 김진태 도정 5대 쟁점 조목조목 지적

기사내용 요약  
GJC 회생 신청, 강원FC 이영표 대표 재계약  
산하기관장 인사, 도청사 부지 결정  
노인일자리 대폭 축소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강원도의회 의원이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022.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강원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태 도정의 쟁점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 계획과 부채 상환 계획을 도의회에 충분하게 보고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생 신청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채무 상환 예산 편성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사님은 보증 채무 상환 2050억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GJC에 대한 회생 신청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보증 채무 상환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법률적 해석에 따라 도의회의 배임 문제는 남는다"고 주장했다.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명백한 이유도 없는 이 대표 계약 연장 포기 방침은 강원도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옳지 않은 정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혈세로 축구전용구장 용역까지 마쳐놓고 백지화 발표한 것 또한 도민을 우롱하고 갈등만 증폭시킨 처사였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산하기관장 인사를 보면 과연 적재적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을 임명하고 있는지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논란과 파행의 모습을 보이는 논공행상도 과유불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청사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해 여론조사의 결과 비율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축소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김진태 "채무상환은 끝이 아닌 GJC.레고랜드 정상화 첫걸음"

"지자체 보증은 국민과 약속"...강원도의회에 추경안 통과 협조 부탁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자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천50억원 채무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도지사로서 고뇌했지만, 이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이 채무를 재원으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이 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도의회에는 연속성이 있어 2018년, 2020년, 2021년에 2천50억원 채무보증과 관련한 3번의 도의회 의결이 있었다"며 "아무리 도지사와 도의원이 바뀌어도 전임자들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GJC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며 보증채무 2천50억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협조를 강원도의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도의 미래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과 비전이 없었다"며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각종 낭비성 축제와 행사, 또는 경제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부실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불꽃놀이에 7억5천만원, 평창국제평화영화제 18억원, 평창평화포럼에 20억원이 투입됐다"며 전임 도정에서 지원했던 보조금 사업을 비판했다.

이어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2천50억원 빚보증을 썼고, 여기에 총 699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했다"며 "알펜시아리조트 때문에 지난 16년간 하루 평균 6천570만원, 연평균 240억원, 총 3천840억원의 이자를 떠안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미래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결국 도민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며 "꼭 해야 할 사업은 더 키우고, 안 해도 될 사업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2 11 17 ( )

02

# “2,050억 상환 GJC 정상화 첫 발”

〈강원중도개발공사〉

## 김진태 지사

상환 후 GJC 채권 회수 예정  
임기 내 채무 60% 감축 순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2,050억원 채무 상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의회에 추경예산안 의결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에 레고랜드 조성사업으로 비롯된 2,050억원 보증채무 상환 예산이 있다”며 “도의원들께서 보증채무의 정당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을 뗐다.

이어 “2,050억원 채무 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2,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050억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지사가 취임 초반 강조했던 재정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2,050억원 채무 상환이 당

초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임기 내 채무 60% 감축 약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총 1조243억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는 연말까지 7,031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말에는 6,743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서’라고 강조한 그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2조5,209억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67억원,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16억원, 이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701억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1,233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적립하게 될 강원도 신청사건립기금 644억원도 포함됐다. 또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다고면서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조8,620억원이다.

# “학생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 신경호 교육감

### 대입진학 지원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진로교육 주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화를 위해 총 1,65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맞춰 미래교육 수요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100억원을 편성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우선 기초기본학력 책임 교육 실현과 대입진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총 211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 진로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5,083억원을 편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 및 체육교육 강화, 문화예술과 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총 71억원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교 안전 강

신 교육감은 “9월부터 지난주까지 모든 강원도교육청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며 “어느 곳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4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참여해 뜻을 펼칠 수 있는 강원교육을 실현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학교와 교육기관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며 “그래야 교육과 일자리가 이유로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줄고, 아이들이 고향에 머물러 지역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 지역의 상생이자 선순환”이라고 역설했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3조3,655억원)보다 7,773억원이 늘어난 4조1,42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23.1% 증가한 규모다. 이하늘기자 2sky@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03

## 김진태 “도 보증채무 전임 도지사 책임 있어”

도의회 내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신경호 “총체적 지원체계 구현 온 힘”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도지사가 바뀌어도 전임 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8년 동안 이 채무를 재원으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나서, 이제 와서 이 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고 했다. 이어 “도정과 도의회에는 연속성이 있다”며 “2018년, 2020년, 2021년에 2050억원 채무보증과 관련된 3번의 도의회 의결이 있었다. 아무리 도지사와 도의원이 바뀌어도 전임 도지사, 전임 도의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공사로 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의 4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겠다. 또, 학교와 교육기관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며 “강원학생 한명 한명이 모든 학령기 동안 연계성 있는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현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은 8조8620억원, 도교육청은 4조14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철화 lfi@kado.net



16일 김진태(사진 왼쪽)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 11 17 ( )  
01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철도 일반철도 전환 타진, 사업 장기화 되나

사전타당성조사 발표 내년 연기  
광역철도서 일반으로 변경 전망  
시설기준 등 강화 사업비도 증가

속보=강원도 속원 SOC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본지 8월 8일자 1면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내년 3월 말로 연기, 사업 조기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정부는 타당성검토가 장기화되자 이 구간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도와 홍천군은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 용문~홍천 철도 사업 추진이 복잡하게 꼬이게 됐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었다. 이는 경제성 등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토교통부는 개편되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B/C)이 주효하게 판단되는데, 용문~홍천 철도 사업 경제성 수치는 기준 미달로 예측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는 예타 면제가 어렵다

는 기류다.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 전세공사비의 30%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비 부담을 놓고 강원도와 경기도, 홍천군과 양평군의 협의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광역철도 사업에선 예타 면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비 100%인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체안에 대해 홍천군 등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일반철도 사업 추진으로 전환되면 시설기준 등이 더욱 강화돼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 자체를 높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됐고 5차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일반철도 사업 전환시 행정 절차는 원점에서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예타 면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성과 균형발전 요소 등에 대한 개선은 강원도에 긍정적이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문~홍천 철도는 총 사업비 8537억원을 투입, 용문과 홍천 구간 34.1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승환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03

##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특위원장 심오섭

부위원장에 최종수

강원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오섭(강릉)도의회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최종수(평창) 의원이 맡는다.

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는 31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심오섭



최종수

이들을 포함해 최승순·한창수·김정수·박호균·홍성기·전찬성·김기철·이한영·지광천·최규만·김용래 의원 등 13명이 2024년 6월까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설화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11



김용래도  
의원(강  
릉)은 17  
일 오전 7  
시 명륜

고·강릉여고정문에서  
2023 수능 격려 응원  
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0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1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김정호

## 도의회, 특별자치국에 환경규제 피해보완 주문

### 수질오염총량제·보호구역 등 지적

강원도의회가 강원도 특별자치국에 “환경 등 규제에 따른 피해를 보완할 논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관희(춘천) 의원은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제31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규제 개혁은 국가적 이익 등의 논리로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있다.아무리노력한들 철책선을 없앨 수 없지 않느냐”며 “반대급부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짚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당당히 받아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문제가있다.맑은물을안내려 보내면물

을못먹는다”며 “지자체간갈등이아니라국가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을받자”고 주문했다.

재정효율화특위는강원도기획조정실로부터 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생·민영화·통폐합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회의에참석한 김한수도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최종 결정은안났지만, (현재의) 10%이상 (기관수를) 줄일 것”이라며 “둘다리도 두들기는심정으로 이해관계자, 해당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위, 폐광지역개발지원 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설화 lofi@kado.net

CBS

## '채권시장 위기 못매' 김진태 '사태진화' 속도

핵심요약

16일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예산안, 강원도의회 제출  
 김 "채무보증 계약, 국민과의 약속"... "사업정상화 첫걸음"  
 "보증채무 상환 이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권 회수할 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6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해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 등을 담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채권시장 위기' 유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관련 채무상환 이행에 속도를 내며 사태 진화와 국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6일 2023년 당초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강원도의회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비롯된 2050억 원 보증채무 상환 예산안이 있다. 의원님들께서 2050억 원 보증 채무의 정당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동안 도지사로서 고뇌했지만, 이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채무보증 계약을 맺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8년 동안 이 채무를 재원으로 삼아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지사 와 의회의 의원이 바뀌어도 전임 도지사, 전임 의회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희생신청 결정은 '불공정 계약, 할세 낭비' 논란이 반복된 레고랜드 사업의 전모를 밝히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50억 원 채무 상환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2050억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반드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CBS

2022 11 16 ( )

지난 9월 28일 김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GJC가 강원도 보증으로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의 원금 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계약을 수정하고 기존사업을 재구성해 보증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발표 직후 지방채 불신 등 채권시장 경색이 가속화했고 김 지사의 구상과는 별개로 책임론이 가중되자 강원도는 서둘러 보증채무 상환을 결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 19

### 초·중등 교부금, 대학 전환 합리적 조정을

-교육 환경 악화 우려 백년대계 차원 검토 마땅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지원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재정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국가 지원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고등교육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최근 11조 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 8조원이 이관되며,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 2000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되던 교육세가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돼 대학 교육에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받지 못하게 되는 예산은 3조원의 4.7%인 1400억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빼고 고등교육에 주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교

육감협의회가 조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되보시기는 임시방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안정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14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절박한 상태라며 환영 입장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심하고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 지원 규모를 늘려 국가 성장 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학재정은 매년 부실해지고, 반도체학과 증설 등으로 예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 건전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부금을 줄이거나 삭감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7 ( )  
/ 19

## 고액·상습 체납 행위 뿌리뽑도록

-강원도 누리집명단 공개, 지방세 및 과징금 신속 징수해야

강원도가 고액의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1월 16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소명 기회가 있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은 173명, 업체는 46곳이고 체납액은 99억원에 달했습니다. 과징금과 이행부담금과 같은 제재금·부과금 체납까지 합하면 100억원을 넘습니다. 강원도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지역사회 및 경제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액은 1조6936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 1명이 3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도 크지만, 심각한 것은 체납 건수가 개인별 50~60여건은 물론이고 최고 98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납 항목은 대개

부동산 취득세와 건축물 재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각종 부과금을 체납한 신규 법인 3곳 모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이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인 과징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복리와 밀접합니다. 징수에 구멍이 생기면 그만큼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각종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압류한 결과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완납하거나 분납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내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중에는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납세 상황이 여의찮다면 분납 등의 조정을 통해 조치해야 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롭게 살면서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강력한 수색으로 신속히 징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도민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빈틈없이 체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2 11 17 ( )

/ 19

## 인재 산실 ‘동곡상’,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원동력

강원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재들을 발굴·시상하는 제17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고하운 풍헌병풍서연구원장, 사회봉사 부문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 교육학술 부문 오덕환 강원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 김숙자 전 배화여대 총장이다. 수상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분들이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해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 올해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내년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수상자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동곡상’은 삼척 출신 7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동곡(東谷) 김진만 선생이 1975년에 제정한 상이다. 강원일보 2대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진만 선생께서는 “동곡상 제정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등불이 되고 활력소 역할을 하는 강원지역의 인재가 많이 나오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

겠다”고 했다. 일찍부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선견지명을 가졌던 것이다. 고향이자 터전인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향토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는 소신이 이 상을 탄생하게 했다. 그랬던 것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중단됐고, 동곡 선생의 장남인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향토애를 몸소 실천해 보여준 선친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32년 만인 2011년 제6회 시상으로 부활했다.

강원도가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인재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다.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동곡상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인재 육성의 산실인 동곡상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자 300만 강원인의 자긍심이며, 다가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힘이자 저력이다. 동곡상은 그동안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지금도 자신의 일터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역대 수상자 한분 한분이 강원도 인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동곡 선생은 “훌륭한 인재는 하루아침에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만민이 가꾸고 보살펴야 배출된다”고 했다. 동곡상을 통한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양성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江原日報

2022 11 17 ( ) / 19

도청사 부지 ‘확장·접근성’ 최고 배점, 당연하다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가 연말 확정된다. 도청사 이전은 강원도 미래가 달린 중대사다. 강원도의 상징인 만큼 지역 발전의 축이다. 인구와 교통의 흐름이 변하고 주민 의식도 달라진다.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강원도청사 이전 사업이 ‘행정신도시’ 건설 수준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지검 등이 동반 이전을 본격 검토 중인 데다 당초 자체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강원도소방본부와 출자·출연기관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도 동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전 작업을 일시

보류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가 평가 기준 중 도청사 외에 추가 개발이 가능한 장래 확장성과 접근성에 최대 배점을 부여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청의 기능은 시청과 군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청은 종합행정의 기능을 해야 한다. 타 시·군과의 연결성을 감안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도청사 이전 부지가 결정돼야 한다. 강원도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도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해 입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부지 자체가 주변 경관과 연계돼야 하고 도로와 교통 현황, 광역교통체계와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청 하나만 옮겨 간다는 단선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과의 조합도 봐야 한다.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부지가 너무 좁아 민원인과 공무원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면 도청사 이전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강원도는 그동안 춘천 내 이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지역으로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춘천 내 이전 부지 선정은 더욱 치밀해야 한다. 특히 ‘춘천 내 이전’을 원칙으로 정했다면 도는 이를 토대로 타 시·군과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른 입장을 지닌 시·군의 주장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듣고 또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복잡 미묘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도청 이용자는 춘천 시민뿐 아니라 18개 시·군 전역의 강원도민

선정위원회, 도시 계획 등 감안 연말 확정

도청 이전은 강원도 상징에다 지역 발전의 축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투명하게 결정돼야

들이다. 여기에다 내년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원년이다. 이를 감안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 춘천 관내에는 좋은 부지가 여럿 있다. 도청 이전을 통해 신도시가 생긴다면 춘천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청사 이전이 결코 정치적 접근으로 결정돼서는 더욱 안 된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과 춘천시장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그러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청사 이전에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상생 협력해야 한다.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되고 배점 기준도 정해진 만큼 부지 선정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